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소개

□ 최신 세계헌법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 연료 전환 정책 규정의 중요문제원칙 위반> 판결에서, 연방 정부기관인 환경보호청(EPA)에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료 전환 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결정을 할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고 연방의회가 이러한 권한을 환경보호청에 위임한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청의 정보 송달의무와 한계> 결정에서, 연방과 주의 헌법수호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하에 수집한 개인 관련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 송달하도록 한 연방헌법수호청법의 조항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 결정에서, 오스트리아방송국(ORF)의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체계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사용자를 수신료 납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연방방송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목적론적·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 판결에서, 미혼여성과 싱글여성(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인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2021년 임신중절법 개정으로 낙태 가능 주수가 임신 20주에서 24주

로 늘어났으나, 임신중절규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여성’의 범위에 미혼여성과 싱글여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한 목적론적·합헌적 해석을 통해 미혼여성 및 싱글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편부의 유족연금만 종료시키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결정에서, 스위스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편모연금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과 달리 편부연금만 종료시키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아울러 제14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할 경우 피고인의 권리> 결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2단계의 심사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청구인이 자신이 인도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실제적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실제적 근거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국가에 수감자의 행동이나 개인적 상황 등에 근거하여 석방을 고려하는 심사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점이 형의 선고 시부터 확인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이번 호에서는 파키스탄 대법원을 소개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독일 통신원의 <독일 연방정부의 유럽연합 소피아 군사 작전 관련 정보 보고 의무에 관한 논의>에서는, 독일 연방정부가 유럽연합이 2015년 계획한 ‘소피아 군사 작전(Operation Sophia)’에 관한 위기관리계획을 연방의회에 조속히 보고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터키 총리가 독일 총리에게 보낸 관련 서한을 송달해 달라는 연방의회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독일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의 유럽연합 사안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연방의회의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였습니다.

프랑스 통신원의 <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중보건법 조항의 위헌 여부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2년 11월 10일 n° 2022-102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에서는, 환자가 사전연명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 치료를 지속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향서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법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판단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였습니다.